



2

한반도 평화·안보 확보

제1절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추진	24
제2절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33
제3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42
제4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축	51

제1절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추진

1.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2차 핵실험

2005년 9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됨에 따라 진전을 보여온 북한 비핵화는 2007년 10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를 통해 비핵화 2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단계 조치 완료를 위해 열린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북측이 시료채취 등 검증 핵심요소를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함에 따라 결국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6자회담은 정체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은 이러한 6자회담의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회담국들간의 외교 노력이 계속된 한 해였다.

2009년 들어 북한은 신년공동사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대남 비방을 계속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¹⁾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채택(4.13)하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금융 제재 대상 등을 지정하였다. 북한은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의장성

¹⁾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으며,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 금지 의무 및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명을 규탄·배격하고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핵시설을 원상 복귀하고 사용후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안보리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는 4월 24일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3개 북한 단체를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도리어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안보리 사죄를 요구하면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등 자위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어 북한은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한·미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6자회담 합의의 위반임은 물론,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안보리는 6월 12일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포함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핵·미사일 관련 품목 및 일부 재래식 무기 수출입 금지 등 제재조치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새롭게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에서는 제재조치가 대폭 확대·강화되었다. 즉, 금수 품목이 모든 무기로 확대되고(단, 소형무기 대북 수출은 허용), 화물검색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압류·처분 규정이 추가되었고, 무상원조 및 무역 관련 금융지원 금지 등이 추가되었다. 또 제재위원회 산하에 제재 이행 상황을 검토·분석하는 전문가 그룹(Panel of Experts)을 설치하는 등 제재 이행 메커니즘도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확대·강화된 대북제재가 포함된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미·일·중·러 등 관련국 모두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성에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주요 관련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문안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결의안 채택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고위급 연쇄협의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5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였다. 정부는 미·일·중·러와 긴급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안보리 조치 등 향후 대응 관련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

축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정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다. 아울러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방북·체류 인원 및 재외국민 안전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

1.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2.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는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다.
3.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4.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즉각 NPT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 결의 1874호 주요 내용(2009.6.12 채택)

- 북한 핵실험 규탄, 추가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 중단
-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및 관련 활동 즉각 중단
- 모든 무기 대북 수출입 금지(단, 소형무기 대북 수출은 허용)
- 금수품목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행·발 화물에 대한 각국 영토내 검색 및 기국 동의하에 공해상 검색, 금수품목 발견 시 압류·처분
- 북한의 핵·미사일·여타 WMD프로그램에 기여 가능한 금융서비스·자산·자원 이전 금지
- 대북 무상원조·금융지원·양허성 차관 금지(단, 인도적·개발·비핵화 촉진 목적 시 허용)
- 대북 무역 관련 공적 금융지원이 북한의 핵·미사일·여타 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동 지원 금지
- 전문가그룹(7인) 설치²⁾, 제재위원회 활동 지원

²⁾ 송영원 전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은 동 전문가 그룹 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2. 제재와 대화 병행 전략(Two-Track Approach) 추진 및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 제안

1) 제재와 대화 병행(Two-Track Approach)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이후 우리 정부는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Two-Track Approach)을 견지하였다. 이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회담(6.5, 워싱턴), 정상회담(6.16, 워싱턴) 등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의연한 대처, 한미공조 및 5자간 단합된 대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6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이에 대한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이후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5자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5자협의 제안 이후, ARF 계기 미·일·중·러와 연쇄 양자외교장관회담(7.22, 푸켓),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중국·러시아 등 관련국 순방(6~7월)을 통해 5자는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8월 이후 북한은 억류 중이던 우리나라와 미국 국민 석방³⁾,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계기 조문단 파견 등 한·미에 대해 일련의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사용후연료봉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시범 발표 등 핵활동에 대한 주장을 지속(9.3)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를 포함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 협의(8.22, 서울), 골드버그 미국 안보리결의 1874호 이행조정관 방한 협의(8.24, 서울) 등을 통해 비핵화 관련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기존 병행전략(Two-Track) 대응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3) 북한은 2009년 3월 미국 여기자 2명을 불법월경 혐의로 억류하고, 남측 개성공단 근로자 1명을 체제비반 혐의로 억류했으나, 동 억류인사들을 8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방북 및 현대그룹 회장 방북시에 각각 석방하였다.

4) 북한은 2009년 9월 3일 주유엔 북한대사가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전면배격하며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 시험 완료, 6자회담 거부, 핵 억지력 강화 등을 발표하였다.

2)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 제안

대북제재의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향후 6자회담 재개에 대비하여 협상전략에 관한 5자간 협의도 지속되었다. 북한의 6자회담 거부, 불능화 역행 및 핵실험 등 일련의 상황에 대처하는 동안, 5자간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북한이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핵실험까지 실시한 상황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온적인 제재만을 부과하고 부분적인 비핵화에 합의하는 과거의 협상 패턴은 탈피해야 한다는 데 5자의 견해가 일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 요구되는 북한의 조치와 5자의 상응 조치들을 한꺼번에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법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 및 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계기 미국외교협회(CFR) 연설(9.21, 뉴욕)과 유엔 총회 기조연설(9.23, 뉴욕)에서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간 북한 핵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협상하던 과거의 접근 방식으로는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조치들(대북안 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단일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상으로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괄타결구상에 대해 미·일·중·러 등 관련국들은 공감을 표명하고, 구체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9.23, 뉴욕), 한·일 정상회담(10.9,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10.10, 북경), 한·미 정상회담(11.19, 서울) 및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12.17, 모스크바) 등을 통해 관련국들과 일괄타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외교협회(CFR) 그랜드바겐 연설(2009.9.21)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

제안 배경

- 북한은 2,13 및 10,3 합의 등 과거 6자회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불능화 중이던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면서 2차 핵실험까지 강행
- 과거와 같이 북핵 프로그램 일부에 대해서 점진적·부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는 인식 확산

주요 내용

-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조치들(대북안전 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단일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상
- 비핵화 조치들은 처음부터 불가역적 조치들로 구성하고, '큰 행동 대 큰 행동'으로 5자의 상응조치와 연결
- 동 합의에는 조치 순서 및 시간 계획이 포함되며, 합의는 한번에 이루고 이행은 동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추진 방향

- 한·미를 포함한 5자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5자 간에는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 형성
- 향후 5자 간 협의를 통해 일괄 타결방안(Grand Bargain)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6자회담 재개 시 북한 측에 제시 추진

3.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9월 이후 중국은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 계기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9월 18일 다이빙궈 국무위원 방북 시 김정일 위원장은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희망’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10월 5일 원자바오 총리 방북 계기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미·북 양자회담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면서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미·북 양자회담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북 양자대화 개최 여부가 6자회담 재개 관련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6자회담 대표 협의

1. 29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2. 15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3. 9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3. 12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3. 15~17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일 협의(도쿄)
3. 24~25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중 협의(베이징)
3. 27~4.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협의(워싱턴)
5. 8~11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 협의(서울)
6. 2~3	미국 국무부 고위급 대표단 방한 협의(서울)
6. 10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베이징)
6. 14~17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협의(워싱턴)
6. 24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모스크바)
7. 6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7. 13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8. 23~24	미국 국무부 안보리결의 1874호 이행조정관 방한 협의(서울)
9. 4~6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 협의(서울)
9. 7~9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 방한 협의(서울)
9. 20~27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협의(뉴욕·워싱턴)
9. 29~30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협의(서울)
10. 6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10. 10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베이징)
11. 5~7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워싱턴)
11. 7~9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일(도쿄)
12. 6~8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서울)
* 12. 8~10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
12. 10~11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서울)
12. 16~19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러 협의(모스크바)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11.19, 서울), 한·러 외교장관회담(11.15, 싱가포르), 한 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중(10.9~11, 베이징), 방미(11.5~7, 워싱턴), 방일(11.7~9, 도쿄) 협의를 통해, 미·북 양자대화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초점을 맞추어야 추진될 수 있으며, 비핵화를 위한 실질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5자의 공동입장을 도출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는 미·북 양자대화 직전과 직후 긴밀한 협의(12.7, 12.10, 서울)를 가졌다.

이와 같이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월 8일부터 사흘간 방북하였으며, 미·북 양측은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 그리고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관해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6자회담 복귀시기를 약속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0년 1월 11일자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비핵화 논의에 앞서 평화협정 회담 개최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5자는 안보리 제재 완화 문제는 안보리 결의문에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안보리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문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진전이 있으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6자회담과는 구별되는 별도 포럼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북핵문제는 한반도·동북아 지역에 국한된 지역안보 이슈가 아니라, 국제비확산체제의 신뢰성 유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국제문제인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게다가 2009년은 제2차 핵실험 등 북한의 극단적 도발행위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소리가 높은 한 해였다.

우리 정부는 ASEM, ASEAN, G8 정상·외교장관 회의 등 주요 계기에 북한 2차 핵실험 등 도발을 규탄하고 6자회담 지지 및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강조하는 결과문서 채택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 진행 중이던 ASEM

외교장관회의(5.25~26, 하노이)에서는 의장성명 일반조항뿐만 아니라 별도 성명을 채택하여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였다. 이후 한·ASEAN 특별정상회의(6.1~2, 제주), G8 정상회의(7.8~10, 이탈리아 라퀼라), 한·중·일 정상회의(10.10, 베이징), ASEAN 및 EAS 정상회의(10.24, 태국) 등 주요 회의시 북핵문제가 포함된 공식문서 채택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개별국가 차원의 입장 표명도 다수 있었다.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하여 40개국, 핵실험에 대하여 70여 개국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핵문제 관련 국제회의 채택문서(2009년)

5. 23	한·EU 정상회의 공동언론성명 채택
5. 26	ASEM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및 북한 핵실험 관련 별도성명 채택
6. 2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 및 북한 핵실험 관련 공동언론성명 채택
6. 26	G8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채택
7. 10	G8 정상회의 의장요약, 선언문 및 비확산 성명 채택
7. 20	ASEAN 외교장관회의 공동커뮤니케 채택
7. 22	ASEAN+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채택
7. 22	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채택
7. 23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채택
9. 18	IAEA 총회 북핵결의 채택
10. 10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10. 21	한·베트남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10. 24	한·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 채택
10. 24	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 채택
10. 25	EAS 정상회의 의장성명 채택

5. 향후 과제

현재 북한은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협상을 요구하면서 아직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으나, 한·미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낸다는 공동의 목표하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일괄타결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계속될 것이다.

제2절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1.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2009년은 2008년 우리 신정부 출범에 이어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출범한 첫해로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공고한 안보태세하에 북핵·북한문제 등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한편,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및 범세계적 문제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감으로써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을 심화해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미 정상차원에서 상호 방문을 포함한 3차례의 회담 등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유대 및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최상의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우선 2009년 4월 2일 G20 런던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공고한 미래지향적 발전 의지를 천명하고,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28,500명) 유지 및 동맹재조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속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원칙하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 간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FTA의 진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키로 하였으며,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G20 정상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비롯하여 양국 간 거시경제정책 공조 등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 오바마 신정부 출범 후 이명박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계기에 6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동맹발전, 북핵·북한문제, 한·미 FTA 등 양자현안과 금융위기 극복, 기후변화를 비롯한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동 회담 시 양국 정상은 ‘동맹미래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하여,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초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8월 부시(George W. Bush) 당시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시 공동 성명을 통해 전략동맹 발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09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미래비전’ 구체화 추진에 합의하는 등 ‘동맹미래비전’ 채택을 위한 사전 기반을 착실히 조성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2009.06.16, 워싱턴)

한·미 양국은 ‘동맹미래비전’을 통해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양자 차원의 협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확대해나가고 동북아의 평화·번영 증진 및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의 협력 범위를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까지 확대하고, 질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지향하고 있다.

‘동맹미래비전’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등 강력한 안보태세의 유지와 동맹재조정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향해나가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및 한반도의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한·미 FTA의 진전을 포함한 경제·무역·투자 관계의 발전과 녹색성장·우주협력 등 실질협력도 계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아·태지역의 평화·번영과 인권, 민주주의의 증진 등을 위해 협력하고 안보문제 관련 상호

이해·신뢰·투명성 제고를 위한 역내 협력을 지지·참여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 해적, 조직범죄,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이라크, 아프간 등에서의 안정·복구 지원 및 G20 등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도모해나가기로 하였다.

11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의 최초 방한 계기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제고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의 내실 있는 이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데 양국 정상이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



한·미 정상회담(2009.11.19, 서울)

되는 2010년 중 적절한 시기에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최초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한·미 전략동맹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에 대해 한·미 간 일치된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미 FTA의 진전 및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녹색성장, 비확산·대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제고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아프간 재건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양국 정상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과 4차례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및 6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발전 및 북핵·북한문제에 대한 대처, 동맹 재조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주요 현안 및 관심사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클린턴 국무장관은 취임 직후 최초 해외 순방지 중 하나로 한국을 방문(2.19~20)하고, 동 방한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진 및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등 미국의 공고한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확인하고, 북핵 불용 원칙과 한·미 공조·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추진 등 북핵·북한문제 관련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 관계 강화·발전 및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력 방침을 천명하였다.



한·미 외교장관회담(2009.02.20, 서울)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는 활발한 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 주요 정책 현안 및 관심사에 관한 협력 및 협의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였다. 2009년 중 미 측으로부터는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 플러노이(Michele Flournoy) 국방부 정책차관,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 홀부르크(Richard Holbrooke) 아프간·파키스탄 특별대표, 캠펠(Kurt Campbell)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한·미 관계 관련 대부분의 주요인사들이 방한하여 우리 측과 관련 협의를 가졌으며, 우리 측에서도 외교안보수석, 외교부 제2차관, 차관보, 다자외교조정관 등의 방미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미 양국간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협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한·미 정상회담

일 자	계 기
2009. 4. 2	G20 런던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런던)
2009. 6. 16	이명박 대통령 방미(6.15~17) 계기 정상회담(워싱턴)
2009.11. 19	오바마 대통령 방한(11.18~19) 계기 정상회담(서울)

한·미 외교장관회담

일 자	계 기
2009. 2. 20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2.19~20)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서울)
2009. 6. 5	유명환 장관 방미(6.4~6)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워싱턴)
2009. 7. 22	ARF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무췌)
2009. 9. 21	UN총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뉴욕)

한편 2009년은 미국의 제111대 의회(2009~2010년)가 출범한 첫해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와의 교류·협력관계 강화 및 미국 의회 내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 미국 조야와 학계 내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의 교류와 협력도 증진함으로써 한·미 관계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양국 의회 간 교류와 관련하여 우리 국회 측에서는 1월 외통위원장, 3월 외통위 의원단 등 다수 의원의 방미가 이어졌으며, 미 의회 측에서는 2월 스킴튼(Ike Skelton) 하원 군사위원장 등이 이끄는 군사위 대표단의 방한, 4월 버튼(Dan Burton) 하원 한국협의회(Korea Caucus) 공동의장의 방한에 이어, 8월에는 버만(Howard Berman) 하원 외무위원장 등 의원단 및 팔레오마바앵어(Eni Faleomavaega) 하원 아·태 소위원장, 혼다(Michael Honda) 하원의원 등이 방한하여 양국 의회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한 미 의회는 남북관계 결의안 채택(6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안 통과(7월), 한·미 FTA 비준 착수를 촉구하는 하원의원 88명의 오바마 대통령 앞 서한 송부(11월)를 비롯하여, 우리의 입장 및 정책을 지지하는 미 의원들의 서한과 발언(15건) 및 의회발언록(8건) 등 한·미 관계 강화·발전을 적극 지지하였다.

2009년 중에는 미국 조야와 학계의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클린턴(Bill Clinton) 전 대통령, 부시(George W. Bush) 전 대통령, 고어(Al Gore) 전 부통령, 깅그리치(Newt Gingrich) 전 하원의장, 해스터트(Dennis Hastert) 전 하원의장,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 등을 포함한 전직 고위 인사들의 방한이 이루어졌으며, 풀너(Edwin Feulner)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톰슨(James Thomson) RAND 연구소장 및 허버드(Thomas Hubbard) Korea Society 이사장 등 학계 인사들도 다수 방한하여 한·미 관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국제교류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국 내 대표적인 정책연구소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및 RAND 연구소에 한국 석좌연구직(Korea Chair)을 설치함으로써 미국 내 한국 정책연구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한·미 관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발전을 위한 민간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미 평화봉사단(Peace Corps Volunteers)의 재방한 초청사업을 수행하였다. 2009년은 향후 2013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한 재방한 사업의 시행 첫해로 7월 제

1차 사업 시 56명, 10월 제2차 사업 시 96명의 전직 한국 근무 평화봉사단원이 한국을 재방문, 과거 봉사지를 시찰하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미국 내에 우리의 발전상을 알리고 한·미 동맹관계의 우의와 협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방한 전직 평화봉사단원은 한



전직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사업
(제1차: 2009.7.5~11, 제2차: 2009.10.25~31)

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들을 만나 과거의 봉사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봉사단원들의 해외 봉사활동 발전을 위해 조언과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 동맹 재조정 및 안보태세 강화

한·미 양국은 최근 수년간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새로운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해나가기 위해 동맹재조정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09년에도 동맹재조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안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21세기 전략동맹'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2009년 중 총 3차례의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 보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권한

2009년 SPI 개최 실적

	일시	대표단	개최지
21차	2009. 3. 2	•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등 • David Sedney 미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한국 (서울)
22차	2009. 5.14	• 김상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등 • Michael Schiffer 미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미국 (워싱턴)
23차	2009. 7.23	• 김상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등 • Michael Schiffer 미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한국 (서울)

조정,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등 동맹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동맹 미래비전(2009.6 채택) 구체화 및 지역·범세계적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1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한·미 양측은 북한 상황을 포함한 최근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북핵·북한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후 연합방위태세와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주요 동맹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전환과정에 반영해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위기 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능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 배치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 및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양측은 확장억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2009년 중 부지조성 공사 등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2008년 1월 합의한 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 Master Plan)을 바탕으로 기지이전 사업기간 및 비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왔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사업의 원만한 이행은 우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보다 강화시켜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09년 중에는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타결되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득하였다. 한·미 양국은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총 5차례의 한·미 고위급 협의 및 수차례의 실무급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09년 1월 15일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2009년 3월 2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금번 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는 유효기간 5년의 협정으로,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2009년 분담금은 2008년도 분담금에 2007년도 소비자물가지수 2.5%를 반영한 7,600억원). 단, 연도별 인

상에 상한선(4%)을 두어 예외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분담금액의 과도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현금으로 지원되던 군사건설비를 3년 내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방위비분담제도가 향후 실소요에 기반한 지원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3. SOFA 운영 개선의 지속적 추진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 해소와 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조성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SOFA 운영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9년 중에도 공여 및 반환기지 환경문제 개선 및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요율 인상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우선 정부는 2004년 12월 발효된 용산기지이전(YRP)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및 수시반환 합의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측과 반환 예정 미군기지의 환경 치유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2009년 3월 공여 및 반환기지의 환경 조사 및 치유 협의 등에 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채택하였다. 기존 절차서인 '부속서 A'를 수정·보완한 상기 '공동환경평가절차서'는 위해성 평가방식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치유 협의를 위한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보강하였으며, 환경분과위 차원에서 이견 발생시 특별합동위에서 한번 더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협의절차를 보강하고, 미측의 치유 이행 과정에 우리 측이 참관하거나 필요 시 조사·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 조사 기간을 기존 50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루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공동환경평가절차서'를 부산 하야리아 기지(Camp Hialeah) 등 7개 기지에 시범 적용키로 하고, 2009년 중 이를 착실히 진행하여 2010년 1월 13일 까지 7개 기지 반환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시범 적용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시범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환경평가절차서'의 보완 필요 여부 등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노무 분야에서는 2009년 4월 동 소관 분과위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 요율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근로자의 공평한 권익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면세물품 불법거래분과위도 3만여 건에 달하는 주한미군 군용품에 대한 면세통관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미군사우체국, PX, 시중에서의 미군용품에 대한 밀수 단속을 지속 강화하였다.

한편 문화재보호분과위는 캠프 스탠리(Camp Stanley), 캠프 레드클라우드(Camp Red Cloud) 등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여 50건의 문화재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역사문화자원' 보호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자체 환경관리지침(EGS)상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협의를 미 측과 진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 감염 증가와 관련 우리 측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처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SOFA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관련 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한·미 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SOFA합동위, 특별합동위 및 분과위 등의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SOFA 운영의 개선·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나갈 예정이다.

제3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1. 한·일 관계

양국 정상은 2009년에도 셔틀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2009년 1월 11일 아소 타로(麻生 太郎) 일본 총리가 방한하였고,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답방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8년 정상회담 시 합의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실질적 경제협력 및 대북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4월에는 '자유사(自由社)' 판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하였다. 이 교과서는 2001년, 2005년 역사교과서 문제를 야기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그릇된 역사관에 기초하여 발간한 것이었다. 우리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자유사판 역사교과서가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4월 1일 런던 개최 G20 정상회의에 이어 4월 11일 태국 파타야 개최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각각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세계적 금융·경제위기, 북한문제 대응 등에 있어서 긴밀히 공조해가기로 재확인하였다.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 민주당은 9월 9일 사민당 및 국민신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였고, 9월 16일에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민주당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23일 UN 총회 계기에 하토야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9일 양자 차원에서 첫 해외방문국으로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북핵문제 해결, 세계적 경제·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국제문제 대응에 있어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에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여러 문제를 진전시켜 나갈 용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12월에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 해설서가 발표되었다.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술이 해설서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일 간에는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2009년도 양국 간 교역규모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8년도 826억불보다 상당히 감소한 712억불에 그쳤으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제2위 교역대상국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문화교류 분야에서는 2009년 9월 최초로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를 서울과 도쿄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2009년에도 과거사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확대사업」 대상으로 사할린 거주 한인 874명이 선정되어 이들의 영주귀국이 추진되었다. 또 7월에는 유엔지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인 구군인·군속의 유골 44위가 봉환되었다.

2009년 3월에 개최된 제17차 한·일 동북아국장회의에서는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관련 문제가 심도 있게 협의되어, 재일한국인의 ‘특별영주자 증명서’ 상시휴대 의무 제도의 폐지가 합의되었다. 또한 11월에는 도쿄에서 한·일 유골 및 공탁금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2010년 3월까지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미불임금 등과 관련된 공탁서 부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일 양국 간 올바른 과거사 인식을 위해 2007년 6월 출범한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2년 6개월간의 공동연구를 마치고 12월 종료되었다. 한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2009년 2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발족되어 2차례의 합동 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09. 1. 11~12	아소 타로 일본 총리 방한(서울)
2009. 4. 1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런던)
2009. 4. 11	ASEAN+3 계기 한·일 정상회담(파타야)
2009. 6. 28	이명박 대통령 방일(도쿄)
2009. 9. 23	UN 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뉴욕)
2009. 10. 9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방한(서울)

|||| 한·일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09. 2. 10~11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 弘文) 외무대신 방한(서울)
2009. 3. 31	아프간 관련 고위급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조찬회담(헤이그)
2009. 4. 16	유명환 외교장관 FoDP 참석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도쿄)
2009. 5. 25	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하노이)
2009. 7. 22	ASEAN+3/EAS/ARF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푸켓)
2009. 9. 29~30	유명환 외교장관 방일(도쿄)

|||| 한·일 고위급 교류

일 자	주요 내용
2009. 5. 21~22	한승수 국무총리, 닛케이신문 심포지엄 참석차 방일(도쿄)
2009. 6. 8~10	니시무라 외무대신정무관 방한(서울)
2009. 7. 3~6	야치 정부대표(前외무사무차관) 방한
2009. 7. 17	제8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하코네)
2009. 12. 11~13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 방한(서울)
2009. 12. 19	제9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제주)

2. 한·중 관계

2009년도 한·중 양국은 2008년 5월 및 8월의 양국 정상 간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격상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기초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이라

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양국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은 고위인사 교류와 접촉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정부·의회·국방분야에서의 대화와 교류 강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4차례의 성공적 정상급 회담 개최를 통해 정상 간 우의와 양국 간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5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4월 리창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방한, 11월 김형오 국회의장의 방중을 비롯하여 12월에는 시진핑 부주석이 방한 등 양국 간 고위급 인적 교류와 접촉이 계속되었다.

2009년도에도 한·중 양국은 경제·통상 및 인적교류를 이어갔다. 2009년 기준 한·중 간 교역액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전년도보다 273억불 감소한 1,410억불에 그쳤으나, 여전히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 무역 흑자국으로,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홍콩, 대만 제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수교 당시 13만 명에 불과했던 양국 간 인적 교류는 2009년 454만 명에 달하였으며, 양국 간 항공 운항편수는 주간 837편을 상회하였다.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어 중국 내에서는 한류(韓流)로 대표되는 한국영화,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유행하였고, 한국에서는 중국어 학습 열기로 대표되는 한풍(漢風)이 확산되었다. 특히 양국의 유학생이 각각 상대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등 양국 간 청소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중 정상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09. 4. 3	G20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후진타오 국가주석 회담
2009. 9. 23	UN 총회 참석 계기 이명박 대통령-후진타오 국가주석 회담

한·중 대통령-총리 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09. 4. 11	ASEAN+3 계기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 총리 회담(태국 파타야)
2009. 10. 10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 총리 회담(베이징)

한 중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09. 2. 24~25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방중
2009. 4. 11	ASEAN+3 계기 양제츠 외교부장 회담(태국 파타야)
2009. 5. 25	ASEM 외교장관 회담 계기 양제츠 외교부장 회담(베트남 하노이)
2009. 7. 22	ARF 계기 양제츠 외교부장 회담(태국 푸켓)
2009. 9. 29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계기 양제츠 외교부장 회담(상하이)

한 중 고위급 교류

일 자	주요 내용
2009. 2. 7~11	천정가오(陳政高) 요녕성장 방한
2009. 3. 22~24	국회 '아시아문화경제포럼' 대표단 방중
2009. 3. 25~27	천방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방한
2009. 3. 30~4. 2	한-중 차세대 정치지도자 대표단 방중
2009. 4. 4~7	리창춘(李長春)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방한
2009. 4. 8~13	오세훈 서울시장, 상하이, 텐진, 베이징 방문
2009. 4. 20~22	리징티엔(李景田) 중국 개혁개방논단 이사장 겸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방한
2009. 4. 20~24	장메이잉(張梅穎) 중국 전국정협 및 부녀자연합회 부주석 방한
2009. 5. 4~9	김대중 전 대통령 방중
2009. 5. 8~13	한국외교협회 대표단 방중
2009. 5. 26~27	이상희 국방부장관 방중
2009. 6. 2~6	김황식 감사원장 방중
2009. 6. 12~13	베이징 개최 IIF(국제금융연합회) 총회 참석차 한승수 국무총리 방중
2009. 6. 15~18	양원창(楊文昌)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 방한
2009. 6. 21~23	후춘화(胡春華) 하북성장 방한
2009. 7. 13~15	이윤성 국회부의장 방중
2009. 8. 20~22	사공일 대통령 특사 방중
2009. 8. 20~24	허용(何勇)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방한
2009. 8. 22~23	탕자쉬안(唐家璇) 전 국무위원 방한
2009. 8. 24~28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방중
2009. 8. 27~29	이홍구 전 총리 방중
2009. 9. 7~8	왕지쓰(王輯思)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일행 방한
2009. 11. 1~3	왕양(汪洋)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광둥성 당서기 방한
2009. 11. 2~6	한나라당 대표단 방중
2009. 11. 18~24	김형오 국회의장 공식 방중
2009. 12. 9~15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 방한

3. 한·중·일 협력강화

2009년도는 한·중·일 정상외교 정상회담이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처음으로 오찬회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10년간 한·중·일의 인적·물적 교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9년 3국간 인적 교류는 약 1,320만 명으로 1999년 658만 명에 비해 2배 증가하였으며, 교역액은 약 1,300억불에서 약 4,300억불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통상, 문화·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협의는 점차 재난관리 등 비전통안보, 북핵, 환경·기후변화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9년에는 4월 ASEAN+3 계기 한·중·일 정상회의, 9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및 10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고위급 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재무, 통상, 관세, 특히, 환경, 보건, 과학기술, 관광·문화, 재난관리 등 분야에서 장관급 회의가 개최됨으로써 분야별 협력이 강화되었다.

특히 3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젊은 세대 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3국 청소년 300명이 참여하여 문화체험, 공동토론 등 일정을 갖는 '제3차 한·중·일 청소년 우호만남(7.21~26)' 및 3국 청소년 밴드팀이 참여하는 '한·중·일 Youth Festival(7.24)'을 개최하는 등 3국 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간의 교류를 통한 우의가 더욱 증진되었다.

또한 3국 협력이 3국의 공동이익은 물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요하다는 점에서 북핵 및 환경·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이슈의 해결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G20 및 UN 기후변화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계기에도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한·러 관계

2009년은 한·러 간 활발한 고위인사교류와 실질협력 증진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다진 한 해였다. 양국 간 협력 범위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자원 분야 뿐만 아니라 농·어업, 조선, 우주항공, IT·나노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었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철·에너지·녹색 '3대 新실크로드'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화통화(5.27)와 G8 확대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7.9, 라퀼라)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제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였다.

4월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방한을 비롯하여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 주요 다자회의 계기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실질협력 증진, 북핵문제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나라 석유(8위)·가스(9위)·유연탄(5위)·우라늄(1위)의 10대 도입국인 러시아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서감차가 등 유·가스전 공동개발, 전력 및 원자력 산업 등 총 8개 분야 20개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한·러 에너지 협력 행동계획'이 서명되었다. 4월부터는 처음으로 사할린-2 LNG가 연 150만 톤씩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에너지 도입 다변화에 기여하였다.

■■■■ 한·러 정상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09. 5. 27	북한 핵실험 관련 전화통화
2009. 7. 9	G-8 확대정상회담 계기 한·러 정상회담(라퀼라)

■■■■ 한·러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요 내용
2009. 4. 24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한 계기 외교장관회담
2009. 7. 23	ARF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푸켓)
2009. 11. 15	APEC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싱가포르)

한·러 고위인사 교류

일 자	주요 내용
2009. 2. 18~20	세친 부총리·슈마트코 에너지부 장관 방한
2009. 3. 1~2	레비틴 교통부 장관 방한
2009. 3. 10~13	크라이니 수산청장 방한
2009. 3. 22~25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러
2009. 4. 24~25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한
2009. 5. 20~21	이석연 법제처장 방러
2009. 6. 21~26	키릴로프 천연자원감독청장 방한
2009. 6. 30~7. 2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방한
2009. 7. 19~21	이상희 국방부 장관 방러
2009. 8. 6~8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방러
2009. 8. 26~29	이샤예프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방한
2009. 10. 11~12	페르미노프 우주청장 방한

또한 세친 부총리 등 고위인사 방한을 계기로 신규 사업 발굴이 활성화되어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사업 및 한·러 합작 극동 조선소 설립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조선 분야에서 최초로 양국 간 협력사업을 열어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2008년 9월 대통령 방러 후속조치로서 러시아 수역내 우리 측 명태쿼터가 40,000톤(추가쿼터 확보 시 45,000톤)으로 확대되었으며, 한·러 수산물불법교역방지 협정 서명을 통해 양국 간 호혜적 수산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우주기술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 8월에는 한국 최초의 소형위성발사체(KSLV-1)인 나로호가 발사되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나노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성화되어, 향후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상용화 기술의 상호보완을 통한 호혜적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9월 방러 시 천명한 '3대 新실�크로드'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지역인 극동시베리아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다. 바사르긴 지역개발장관의 방한(6.30~7.2)에 이어 이샤예프 극동관구 전권대표가 사할린,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지사 및 주요 기업인 등 극동지역 주요 인사들과 함께 방한(8.26~29)하여 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9월에는 하바롭스크 주정부가 주관하는 제4차 극동국제경제 포럼과 제5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가 연계 개최되어 양국 중앙정부 차원뿐 아니라 극동지역 지방정부와 우리 지자체·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한·러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들어 감소(대러 수출 42억 불, 수입 58억 불)하였으나,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 누계는 지속 증대되어 23.8억불(2009년 12월 현재 신고 기준)을 기록하였다.

■■■■ 한·러 투자 현황

(신고기준, 백만 불, 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한국 → 러시아	건수	29	49	45	98	152	189	424
	금액	91	69	121	432	522	725	2,383
러시아 → 한국	건수	39	34	34	38	64	24	412
	금액	1.8	2.5	2.4	2.5	16	1	40

*자료: 수출입은행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문화·인적 교류도 지속 확대되었다. 한·러 문화부장관회담(3.23) 계기 '2009~2011 한·러 문화교류계획서'가 서명되고,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3개 대학 내에 러시아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양국 간 문화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2010년 1월에는 한·러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어 양국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상대국을 방문하는 등 상호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제4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축

1. 남북 관계

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한 유연한 접근,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국민적 합의라는 4가지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남북 관계 발전을 지향하고, 남과 북 모두 이익이 되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비핵화에 따른 평화구조 창출과 남북 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여러 계기에 제기해왔다. 대통령께서는 2009년 8.15 경축사에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한·미, 한·일 정상회담, ASEAN+3 정상회담 등 주요 양자 및 다자회담 계기마다 남북대화를 중요시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다.

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협력 사업 지원

우리 정부는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산모 및 영·유아 보건·영양개선 사업, 식수·환경개선 사업, 교육 사업 등 대북 관련 사업에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참여해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말라리아 방제품, 영유아 지원 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통해 총 1,836만불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부기금 583만불을 지원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정부차원에서 신종플루 치료제 50만 명분(1,285만불 상당)을 지원하였다.

3) 인도적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11일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남북한 간 협력 추진을 제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등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왔다.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고,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에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009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이산가족 상봉 기회 확대의 노력도 추진해왔다.

4) 북한 인권문제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제64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 우리 정부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이에 참여하였다.

5) 북한 이탈주민문제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 하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하여 체류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한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009년에는 연간 2,900명을 상회하였으며, 2009년 말 기준 총 18,009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였다.

연도별 탈북자 국내 유입 현황

(단위: 명)

구분	~ '89	~ '93	~ '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총계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52	18,009

*2009년 입국 인원은 잠정 통계 / 출처: 통일부

우리 정부는 탈북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후생·복지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 적응교육 차원에서 각종 교양·학습 도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 주거 알선,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등의 형태로 제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1)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추진 동향

9.19 공동성명(2005)은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13 합의(2007)에서는 6자회담 내 5개 실무그룹의 하나로 동북아평화안보체제(NEAPSM) 실무그룹을 설치한 바 있다. 2008년 6자회담 당사자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해 각각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7월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6자회담 당사자 외교장관들은 6자회담이 동북아의 궁극적 평화와 화해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였다.

2009년 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3차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NEAPSM)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 추진이 용이한 것부터 시작하는 점진적 접근

근방식의 유용성 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초안이 논의된 바 있다.

2008년 12월 이래 북한의 6자회담 거부로 인해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NEAPSM) 실무그룹 후속회의는 아직 개최되지 못한 상황이나, 향후 북핵문제의 진전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관련 논의도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안보체제(NEAPSM) 관련 논의가 역내 상호신뢰 구축, 공동번영, 평화안보 촉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 동북아 협력대화(NEACD)

한편 민·관 차원(1.5 Track)에서도 동북아 지역 다자 간 안보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아 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가장 대표적이다.

2009년 10월, 제20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미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한과 미·일·중·러의 정부대표 및 학계인사가 참석해 북핵문제 해결방안, 남북관계의 발전방향, 그랜드 바겐 및 동북아 평화구조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